

전국이 車車車 ‘무한경쟁’ 광주 ‘100만대 생산’ 차질

대구·인천·경남 이어 전북·전남까지 미래산업 ‘눈독’

전국 차지단체들이 자동차를 미래동력 산업으로 ‘눈독’ 들이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선 6기 들어 광주와 상생협약까지 맺은 전남과는 때마침 자동차 공장 설립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됐으며, 인근 전북을 비롯한 대구, 울산,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차지단체가 자동차 산업을 놓고 무한경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른바 자동차 산업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자동차 선도시인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진행 중이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타 차지단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에 나서면서 고전하는 분위기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지역인 광주와 울산, 경기도, 부산, 충남 등과 더불어 전남과 전북, 대구, 인천, 경남 등이 자동차 산업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산업 유치전에 뛰어든다. 특히 전남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과 곡성에서 연이어 자동차 20만~30만대 생산 공장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 올인하고 있는 광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선 6기 취임 직후 첫 유럽 방문지로 독일을 찾아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는 등 자동차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특히 인천은 민선 6기 들어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 8대 전략산업으로 발표했으며, 충남도는 수소자동차 메카 조성 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도시인 울산은 최근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자동차와 조선, 섬유 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 산



업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그동안 튜닝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이정현 의원을 중심으로 완성차 공장 유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도는 최근 확정된 ‘2014~2018년 5개년 전북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생산도시인 부산도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센터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

대구의 자동차 산업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돕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구 창조 혁신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은 대구를 섬유와 자동차 부품 중심지로 키워내겠다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반면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주 지역산업발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달 말로 예정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포함 여부도 한달 이상 미뤄지는 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차지단체의 견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차지단체들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처럼 웃음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세월호 3법 이달 마무리·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대통령·여야 지도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세월호 3법을 기본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

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 이 같은 합의 사항을 포함한 15개 항의 논의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특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동에서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봤던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만큼 논의는 일단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성

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하면서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동서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개헌과 관련해 언급을 삼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새정치연합은 협조는 하겠지만 추산 능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원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10km→30km 확대 방재체계 개편·방호장비 구축 ‘비상’

장성·함평·무안·부안까지 포함

내년 하반기부터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남도가 방호약품 관리 및 비상시 배포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기존 약 10km에서 30km까지 확대되면서 영광·고창 등 물론 장성·함평·무안·부안 일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는 1만4000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56억을 들여 방호약품과 방호장비, 방사선 감시기 등을 구입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6면>

전남도는 29일 서재필실에서 한빛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 공무원, 환경단체 등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과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등 방재체계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 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한 구역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IAEA의 권고 등을 받아들여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개정,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5~5km)과 긴급보호조

치구역(20~30km)으로 세분화하고 확장시켰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 비상시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대피시켜 보호하는 구역, 긴급보호조치구역은 위기상황 시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는 구역이다.

이번 방재대책법 개정안은 다음달 시월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계획구역은 내년 5월까지 확정한다.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면 현재 원전 반경 2km까지 설치한 경보시설(비상방송망)을 2015년 말까지 예방적 보호조치구

역인 5km까지 확대해야 하며, 4년에 한 번 실시하던 부지별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주민 대피 등 특정분야 집중훈련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한빛원전에서 35km 떨어진 광주시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자체적인 지역방재계획과 시민행동수칙을 만들어 오는 31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이허영 한빛원전 민간 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 및 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옥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장은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중 규제시스템 도입을, 양문수 원불교대책위원회 영광집행위원장은 주민 직접 참여 감시제도 신설과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장성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상업시설용지 40필지 외 산업·지원·공공용지 분양

장성 나노산업단지

- 1번 일반국도
- 13번 일반국도
- 24번 일반국도
- 25 호남고속도로 광산IC
- 253 고창-담양간고속도로 북광주IC
- 광주공항
- 고속전철(장성역)
- 고속전철(광주역, 송정역)

공급대상 용지 및 공급방법

구분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백만원)	공급방법
산업용지	14	90,528	498~2,495	입주심사
물류용지	1	18,369	3,637	경합시 우첨
우성복지	12	4,869	186~212	
지정지	1	2,847	991	
주유소	1	2,721	1,706	경쟁입찰
주차장	3	5,425	195~567	(낙찰가)
상업시설	40	17,405	116~399	
계	72	142,164		

입주자격

- 산업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과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제한업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업종 (세부분류 61개) 제외
- 지원, 공공, 상업시설용지: 일반 실수요자

분양(입찰) 신청 절차 및 일정

구분	신청	입주계약 신청	입주심사 및 선정, 입주계약체결	분양계약 체결
산업	11.17~11.19 한국산업단지공단	11.17~11.21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11.24~12.3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12.04~12.05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 공공, 상업	11.17~11.19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시 제출, 개찰 및 낙찰자 선정 11.20 한국산업단지공단	11.27~11.28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사항

- 분양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장성사업단 (전남 장성군 남면 신태로 149-6)
- 입주신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T.(062)576-9315
- 전자민원 (http://minwon.innopolis.or.kr)

▶ 본 공고문과 토지 세부내역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공공설립관리정보망: www.femis.go.kr
- 분양 및 처분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전라남도 JeollaNamdo

장성군 Jangseong

광주연구개발특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장성사업단
070-8895-7775~8